

## 『2002년 産業政策 方向』

辛國煥 산자부 장관, 외신기자간담회서 설명

辛國煥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 3월 21일 외신기자클럽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국경제의 현황 및 2002년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요 정책기조를 설명하였다.

후장관 기조연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수출회복과 생산성향상 투자를 위한 거시-미시 정책을 통해 잠재 성장률 수준인 5% 이상 달성 가능
- ② 투자는 생산성향상 및 중소기업 정보화, IT, BT, NT 등 신기술 그리고 부품, 소재산업에 역점
- ③ 수출은 4월중 증가세로 발전하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 연간으로는 10% 이상 증가세 예상 - 수출정책은 물량보다는 디자인, 브랜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질적이며 채산성 있는 수출이 되도록 추진
- ④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역산업 진흥, 부품소재산업 육성,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안정적 산업기반 구축
- 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AmCham에서 지적한 외환 규제, 노동시장 유연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상하이, 홍콩 등에 비해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 이와 함께 월드컵 기간 중 CEO 포럼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 ⑥ 동북아 산업 협력을 위해 아시아 경제 연맹을 3월중 발족하고 10월 중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 개최
- ⑦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구조개편은 당초 일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 최근 전력산업 노조의 불법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치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 대처

## 우리나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정식가입

OECD 회원국 중 26번째로 가입, 선진에너지국제외교의 전기마련

“국제에너지계획에관한협정(IEP협정 : 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에 대한 국내비준 절차가 완료되고(2002년 2월 26일 국무회의 통과, 2002년 3월 5일 대통령 재가), 3월 18일(현지시각) 벨기에 정부에 동협정가입서를 기탁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동협정 71조에 따라 3월 28일(가입서 기탁후 10일 경과)부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정식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는 2001년 4월 IEA 이사회에서 IEA가입이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회원국(de-facto member country)’의 지위를 획득하여 IEA 이사회 등 공식 · 비공식회의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금번 IEP협정의 국내비

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OECD국가 중 26번째로 IEA 정식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정식회원국이 됨에 따라 국제에너지외교에서 에너지 수입 세계 10위인 우리 나라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들과 함께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체제 형성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고, 비상시 에너지안보의 확보 및 선진국의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기술개발 동향 파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의 각종회의(공식회의 연 30여회 이상 : 이사회, 장기협력상설그룹회의, 비상대비상설그

IEA 개요

- IEA는 1차 석유파동 직후(1974),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OPEC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IEP 협정(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 : IEA 설립근거가 되는 조약)에 따라 설립된 석유소비국 공동체이며, 현재는 국제 에너지정책 협의기구
- 회원국 현황(최초회원국 : 16개국, 추가회원국 : 10개국)
  - 최초회원국(16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서독,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추가회원국(10개국)  
노르웨이('75), 그리스('76), 뉴질랜드('77), 이태리('78), 호주('79), 터키, 포르투갈('81), 프랑스, 핀란드('92), 헝가리('97), 체코(2001), 한국(2002)
-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미가입

협회, 석유시장상설그룹회의 등) 참가 등을 통해 에너지부문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에너지 국제규범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해진다.

한편 동협약 가입에 따라 우리 나라는 석유비축(순수입량기준 90일분 이상), 비상사태시 석유수요억제 및 석유할당,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지며, OECD 분담금 비율에 따라 소정의 분담금 납부의무(2002년의 경우, IEA예산의 약 1.8%인 약 4억원 전망)가 있다.

**2002년 1월중 전력소비량 242억kWh, 사상 최고**

금년 1월중 전력소비량은 작년 1월에 비해 13.8%가 증가하였으며, 최대소비량을 기록했던 작년 12월보다도 5.8%가 증가한 242억 4400만kWh로 나타났다.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가장 전력소비가 많은 산업용이 작년 1월보다 13.5%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주택용, 일반용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소비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용도별로는 산업용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주택용은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용은 125억 6300만kWh를 소비하여 전체 소비의 51.8%를 차지하였으며, 작년 한해 동안 월 평균 110억~120억kWh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10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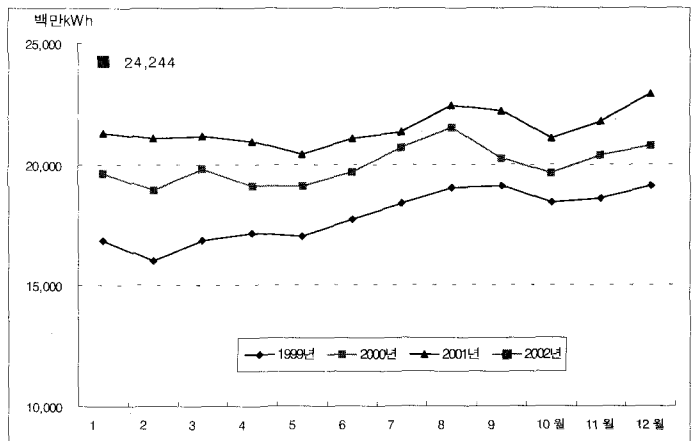
주택용의 경우 59억 4500만kWh를 소비하여 24.5%를 차지하였으며, 작년 2월에 53억 4800만kWh를 기록한 이후 7월에 35억 7200만kWh까지 감소하였으나 10월부터는 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일반용보다 높은 소비를 기록하였다.

일반용은 48억 900만kWh를 소비하여 19.8%를 차지하였으며, 작년 8월에 56억 9200만kWh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10월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기타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용은 9억 2700만kWh를 소비하여 작년 1월에 비해서 12.2% 증가하였다.

산업용 전력의 주요 업종별 소비실적을 보면 철강, 자동

〈최근 3년간 전력소비 실적〉



차, 요업, 기계장비, 조선 등이 작년 1월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화학제품, 섬유, 석유정제 등은 증가율이 비교적 낮았다.

철강은 산업용 전체 소비의 17.4%에 해당하는 21억 9000만kWh를 소비했으며, 작년 1월 대비 19.6%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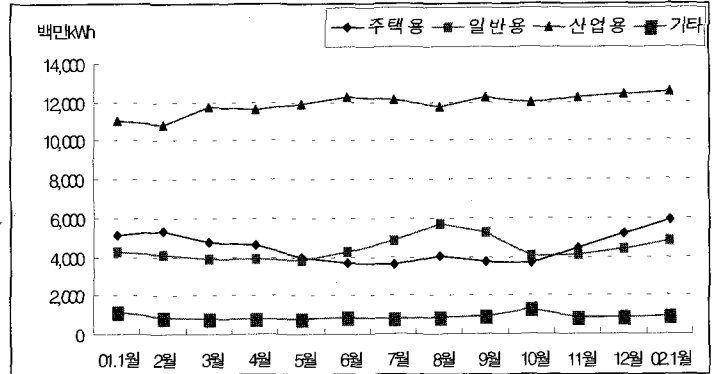
화학제품 및 섬유는 각각 16억 8000만kWh, 11억 6000만kWh를 소비하여 2위, 3위를 차지하였으나 작년 1월에 비해서는 6.8%, 5.5% 증가에 그쳤다.

반도체, 사무기기, 전기기계는 각각 8억 9000만kWh, 2억 3000만kWh, 2억 2000만kWh를 소비하여 작년 1월대비 13.0%, 6.9%, 3.0% 증가함으로써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성장률이 높지 않았다.

자동차, 기계장비, 조선 등 기계산업은 각각 7억kWh, 4억 6000만kWh, 2억 1000만kWh를 소비하였으며, 작년 1월 대비 증가율이 19.8%, 19.4%, 25.9% 등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기타 펄프종이, 요업, 식료품, 고무제품, 조립금속, 석유정제 등이 각각 7억kWh, 6억 9000만kWh, 4억 5000만kWh, 4억 1000만kWh, 3억 8000만kWh, 3억 6000만kWh를 소비하여 작년 1월대비 10.2%, 27.3%, 10.0%, 17.5%, 17.2%, 1.6% 증가함으로써 석유정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용도별 전력소비 실적〉



참고자료 최근 3년간 월별 전력소비 실적

월별	최근 3년간 월별 전력소비 실적 (단위: 백만kWh)				전년동월비 증가율(%)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	16,858	19,635	21,300	24,244	13.8
2	16,034	18,946	21,097		
3	16,826	19,811	21,179		
4	17,172	19,096	20,933		
5	17,014	19,134	20,435		
6	17,698	19,682	21,057		
7	18,391	20,686	21,356		
8	19,013	21,493	22,434		
9	19,118	20,252	22,212		
10	18,410	19,642	21,064		
11	18,570	20,369	21,758		
12	19,109	20,792	22,906		
계	214,213	239,538	257,731		

## 차세대 LED 교통신호등을 국가표준(KS)규격으로 제정

### 에너지절약 및 교통환경 개선 전망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 金東哲)은 최근 에너지 절약 및 교통환경 개선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LED 교통신호등에 대한 국가표준규격을 처음으로 제정 고시하였다.

이 신호등은 기존신호등의 백열전구 대신 반도체 발광소자(light emitting diodes)를 장착한 제품으로 85% 이상이 절전(백열전구:100W, LED:15W)되면서도 색깔이 선명할 뿐만 아니라, 10배 이상의 긴 수명(백열전

구: 4,000시간 정도, LED: 50,000시간 이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기존신호등의 1/10 소요)되는 경제성과 성능이 매우 우수한 차세대 교통신호등이다.

따라서 에너지 절감은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수 있고 시인성(視認性) 향상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있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잠정구매규격등을 제정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아직 관련규격이 없어 생산 및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기술표준원에서는 2001년도에 “LED 교통신호등의 성능평가 방법개발 및 표준화 연구”를 수행한 후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명표준기술연구회의 기술검토와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내의 도로조건 및 교통환경에 적합하게 제정하여 2002년 3월 18일에 고시하였다.

KS 규격 제정과 병행하여 2002년 4월중으로 국내 생산회사에 대한 KS 인증을 부여하기 위하여 LED 교통신호등 제조공장에서 갖추어야 할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및 품질보중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요건 등을 규정하는 제품 심사기준을 관련업계 및 교통관련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교통신호등이 약 28만 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호등 등수는 80만개 정도로 향후 기존 신호등 전량을 LED 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하면 연간 208GWh(전기요금 절감액 : 114억원)의 전력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기존신호등에 비해 밝기, 색상, 시인성 등이 우수한 차세대 장수명 신호등이 공급되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된다.

## 배전자동화시스템 설치로 고장정전시간 획기적 단축

현장에 나가지 않고 중앙제어실에서 개폐기 조작

고장정전 복구시간을 평균 73분대에서 6분대로 단축

산업자원부에서 국책과제(1990~1993)로 지원된 『한국형 배전선로운전자동화 기반기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운영 선진화를 위해 '94년부터 '97년까지 배전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시험을 거쳐 '98년부터 상용화된 시스템의 본격 확대에 들어가 2001년 말 현재 전국 185개 사업장 중 175개 사업장에 배전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배전자동화시스템의 설치로 고장발생시 배전선로 운전 정상화에 평균 73분대가 소요되던 것을 6분대로 단축시켜 정전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고, 첨단 시스템의 국산화로 8천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도 달성하였다.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배전선로에 고장이 발생하면 20km 정도의 모든 배전선로가 정전되고, 고장원인을 찾

아 복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교통체증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배전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고장발생 즉시 고장위치를 찾아내어 고장발생 구간 1~2km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신속히 전기공급을 재개시켜 장시간 정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개선하였다.

향후 최신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기존 시스템보다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배전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지역 9개 지점과 지방 대도시 13개 지사에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완료 후에는 전자지도(GIS)상에서 배전선로 고장위치 판독을 한층 빠르게 할 수 있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자동으로 고장복구처리가 가능해져 전기의 품질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 FNCA, 원자력관련 잉케트

### 아시아 고교생을 대상으로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은 빠르면 9월부터 아시아제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의식조사를 실시한다. 각국의 장래를 짚어질 고교생으로부터 솔직한 의견을 듣고 동시에 원자력발전과 방사선이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FNCA에 의하면 이러한 조사는 국제적으로도 처음이라 한다.

조사대상은 FNCA 가맹 9개국의 수도 또는 근교에 사는 고교생으로, 1개국당 약 천명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서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방사선이 의료나 농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등을 묻는다.

원자력발전에 관한 사정은 나라에 따라 여러 가지인데 한국, 일본과 같이 산업이나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중핵에너지인 나라도 있는가 하면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이제부터 원자로 첫 호를 건설하는 나라도 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각국의 차이를 배경으로 국가마다의 의식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아시아의 젊은 세대가 원자력을 받아들이는데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분석·검토하려는 것이다. FNCA에

서는 각국의 젊은이가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대상은 무작위로 한다고 하며 이번 조사가 아시아의 원자력 개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FNC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방사선 이용을 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하여 발족한 조직으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타이, 베트남의 9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방사선의 의료 및 농업에의 이용을 추진하거나 원자력홍보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도시바, 중국에 합병회사 설립 GIS 톱회사로의 시동

도시바(東芝)는 최근 중국에서 전력용 가스절연개폐장치(GIS)를 생산·판매·보수하는 합병회사인 河南平高도시바高壓開閉有限公司 개업식을 현지에서 개최하였다. 도시바에서는 西室泰三 회장 등이 출석하여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성대하게 축하하였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유통설비의 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해 도시바의 기술력과 중국측 河南平高電氣股份有限公司의 인재, 판매루트를 살려 GIS의 톱기업을 지향한다고 한다.

합병회사는 도시바(東芝)와 河南平高電氣와의 반반출자로 2000년 9월에 설립되었는데, 작년부터 공장 건설

에 들어가 금년 1월에 완성하였다. 생산하게 될 제품은 GIS, 가스절연단로기(GCB) 등이다. 그 중에서도 252kV GIS, 126kV GCB에 힘을 쏟는다. 초기에는 주요부품을 일본에서 가져오지만 차후에는 중국내에서 모든 재료를 조달할 계획이다.

개업식에는 도시바에서 西室 회장을 비롯, 전력시스템사의 간부가 다수 참석하는 등 약 4백명이 합병회사의 사업개시를 축하하였다. 西室회장은 인사말 중에서 「현재 실시중인 연수(研修)의 추진을 비롯하여 앞으로도(도시바가 갖고 있는)기술, 관리노하우를 중국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간다」는 말을 특히 강조하였다. 또 「중국의 전력유통설비의 확충에 크게 공헌하고 싶다」고 그의 포부를 밝혔다.

중국의 河南平高電氣측도 「첨단기술, 관리기술 등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강조하였다. 이밖에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중국시장에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平頂山市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축사가 관계자로부터 연이어 나와 합병회사에 대한 중국측의 높은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 도시바는 이러한 합병회사를 통한 중국의 전력시장에의 진출을 강화한다. 기술협정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실시주체로 참가함으로써 지속적인 이익을 확보해 간다는 방침이다.

## 연료전지를 좀더 몸가까이에

### 日 에너지廳 방침

일본의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연료전지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활동에 힘을 방침이다. 본격적인 보급에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연료전지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며 어떤 메리트를 가져다 주는지 일반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자동차의 시승회라든가 모델주택에서의 데먼스트레이션 등을 실시한다. 이는 수소에너지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연료전지는 온실효과가스나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지 않는 클린한 전원으로서 기대가 크다. 전력, 가스, 가전, 중전, 소재, 화학, 자동차 등 폭넓은 산업이 관련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과 고용창출에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경제산업성은 고체고분자형연료전지(PEFC)의 개발·보급전략 프로그램을 책정했는데, 2010년에 자동차 약 5만대, 가정용의 정치(定置)용 약 210만kW, 2020년에는 각각 약 500만대, 약 1000만kW로 도입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다만 현재는 아직 기술개발도상으로 일반시민은 제품이나 이용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수소를 위험한 것으로 보는 경향도 많아 그 이용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에너지청은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도록 계몽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검토중인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주행시험의 일반공개와 시승회, 수소공급스테이션의 건학회 등, 정치용(定置用)에 대해서는 모델주택에서의 이용체험이라는 대책을 들 수 있다. 연구공모때에 계몽활동을 조건으로 한다는 안도 있는 것 같다.

## 일본의 20kV급/400V 배전방식과 전기설비

그 동안 일본의 정부, 전력업계, 기타관계단체 등은 20kV급/400V 배전방식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유효성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정부에서는 1971년에 구(旧)통산산업성 공익사업국이 「과밀화대책위원회보고」를 낸 것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관계단체로서 2000년 12월에 전기협동연구회의 「20kV급/400V 배전방식 보급확대기술」에 대한 조사연구보고가 있다.

또한 작년 6월에는 일본전기공업회가 「배전전압 승압과 전선지중화 추진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여 20kV급

/400V 배전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언을 받은 정부측은 당분간은 공식적인 검토의 장을 만들 예정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느 보고서나 제안도 이 배전방식이 수급양면에서 경제성이 우수하며 안전 확보도 이를 수 있고 투입동량(銅量)·전력손실 삭감으로 CO<sub>2</sub> 배출량의 저감도 이를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CO<sub>2</sub> 삭감량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미쓰비시電機와 住環境計劃연구소가 전력유통설비에서 연간 130만톤, 200V 가전(家電)에서 연간 300만톤의 삭감효과가 생긴다는 시산을 보고한 바 있다.

유효성에 대한 실증에 있어서는 도쿄(東京)의 임해부 도심과 오사카(大阪)의 남항(南港) 코스모스퀘어에서 전기사업자에 의한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전기협동연구회의 400V 수요설비 매뉴얼을 시작으로 금년도 말에는 전기설비학회에 의하여 「400V 수요설비의 민간기술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며, 설계·시공·보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1971년의 통산성보고 이래 31년이 지난 현재, 이 테마는 이행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진 감이 있다. 보고서에는 이행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는데 최대의 과제는 부하기기의 이행대책일 것이다. 부하기기 및 그것들에 대한 국내배선설비는 이행기간중, 2중정격에 대응가능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트 증가가 따르고 그것이 소비자부담이 되는 것이다. 옥내배선 등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의 개정과 전기해석(電技解析) 제7장의 「국제규격의 도입」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도체의 필요성도 생길 것이다.

이제야말로 정부는 결단을 내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지도력을 발휘하여 명확한 이행스케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일본 업계의 생각이라 한다.

### 핀란드에서 新規原子爐 건설 움직임

핀란드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간전력회사인 TVO가 작년 11월에 신청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전각료 중 찬성 10, 반대 6, 기권 2로 승인(원칙결정)하였다.

원칙결정에 의하면 발전소의 건설은 기존의 Lovisa 또는 Olkiluoto 원자력발전소 중 어느 하나에 증설하게 된다. 출력은 100만~160만kW이며, 모형은 미정이다. 건설비용은 100억~150억 핀란드마르카(14억 6900만불~22억 350만불)로 견적되었다.

정부가 신규로(新規爐) 건설을 원칙결정한 것은 '93년 2월 이후 9년만의 일이다. 그때는 의회(一院制)가 찬성 90, 반대 107로 부결하여 결국 건설

계획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핀란드의 원자력법에 의하면 신규로의 건설허가절차는 우선 정부가 계획을 원칙결정한 후 의회가 그 시비에 대하여 심의한다. TVO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허가를 국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산업성 등 관계성청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평의회가 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원칙결정은 계획의 제일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경우 의회는 이미 소집되어 있어 빠르면 5월에라도 표결이 있을 것이라 한다.

인구 약 5백만인 핀란드는 전력수입국이다. 현재 Lovisa(PWR, 51만kW)와 Olkiluoto(BWR, 87만kW)에 2기씩 합계 4기(합계출력 276만kW)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과거 10년간의 평균설비이용률은 90%를 초과하고 있다. 판매전력량의 전원구성에서는 원자력 30%로 가스화력과 함께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력은 20%이다. 러시아와 북유럽제국에서의 수입전력은 15%에 달하여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다.

북유럽의 전력시장은 현재 공급과잉이지만 핀란드에너지산업연맹(피너지)은 2005년 전후에는 공급부족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유럽은 수력이 공급의 주전원으로 발전전력량이나 전력가격은 강우량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 화력발전연료인 천연가스도 러시아로부터의 파이프

라인에 의존하는 등 전력의 안정공급을 불안시하는 소리는 전부터 높았다.

또한 핀란드방사선·원자력안전국은 작년 12월, TVO의 신규로건설계획에 대하여 「대체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사전평가, 안전편에서의 보증서를 이미 발부하였다.

### 연립정권내에서 찬부(贊否) 반반

여론도 순풍이다. 건설예정지가 되는 기존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하는 각 자치제도 작년 3월, 연이어 증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 지방유력자가 금년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회답자의 40%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계획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 반대 33%를 상회하였다. 다른 회사가 지난 '91년말의 여론조사를 했을 때 찬성 28%, 반대 49%였던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 이해도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최대의 고비가 되는 것이 의회의 동향인데, 5개당으로 구성되는 연립정권내에서도 국민연합은 원자력 추진을, 좌익연합과 녹색당은 반대를 내거는 등 의견은 양분되고 있다.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의 포섭을 둘러싸고 양파는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현시점에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핀란드에 새로운 원자의 불이 켜질지 아닐지는 의원 하나 하나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